

미스터피자 ‘MP그룹’의 추락 ‘갑질 논란’ 결국 상폐 위기로



안진으로부터 ‘의견거절’ 받기도
150억대 횡령·배임으로 실질심사
개선안 실천해 빠르게 정상 회복중

토종 프랜차이즈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상장 9년 만에 증시 퇴출 위기에 처했다.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의 ‘갑질’ 논란 이후 경영난을 겪으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된 탓이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MP그룹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15명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위가 이번 기업심사위 결정을 받아들이면 MP그룹은 코스닥 상장 9년 만에 퇴출이 확정된다.

MP그룹은 1990년 9월 설립된 미스터피자 운영사다. 일본에서 출발한 브랜드지만 국내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 결과 한국 법인이 일본 본사를 역으로 사들였

고, 2000년대 후반에는 국내 피자업계 1위로 올라섰다. 이러한 성장세에 힘입어 2009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다.

그러나 2014년부터 매출이 역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업계 1위 자리에서 밀려났고, 2016년에는 정 전 회장이 경비원 폭행 혐의로 ‘갑질’ 논란에 휩싸이면서 가맹점 상대 보복 출점, 친인척 부당 지원 등이 문제가 됐고, 이는 경영 악화로 이어졌다.

MP그룹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줄곧 영업손실을 기록해왔다. 올해 반기보고서는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기도 했다. 회계법인의 의견 거절은 MP그룹이 제출한 자료 등이 부실해 재무제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또 현행 코스닥 퇴출 요건에 따르면 상장사에 별도 재무제표 기준 4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면 관리종목 지정 등을 거쳐 상장폐지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정 전 회장의 150억 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에 따라 MP그룹은 지난해 10월부터 1년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개선기

간은 지난 10월에 종료됐으나 MP그룹 측이 실질심사 기간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고, 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기한을 이달 3일까지로 연장했다.

MP그룹은 “지난해 10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다방면의 개선안을 빠짐없이 실천했다”며 “이에 힘입어 MP그룹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연간 -110억 원(연결 -3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2억 원(연결 66억 원)을 기록하며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룹에도 기업심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할 때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코스닥시장위에서 이번 결정이 잘못됐음을 적극 해명하고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상장사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달 중으로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상장폐지를 확정하면 MP그룹은 정리매매 절차에 들어간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되는 기업의 투자자들이 보유한 주식을 최종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7거래일 간의 매매 기간을 주는 제도다. 정리매매에 들어간 주식은 30분 단위로 단일가매매 방식을 적용해 거래하며 가격제한폭도 두지 않는다.

/손업기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4일 여신금융포럼에서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나유리 기자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으로 3년간 소비자혜택 9000억 ↓”

제7회 여신금융포럼

상품 탑재 서비스 삭제·연회비 인상
카드사 공동플랫폼 수익배분해

올해 정부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 방안으로 3년간 카드회원 혜택이 9000억 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여신금융협회와 여신금융연구소는 4일 서울 중구 페르티아워에서 ‘여전사의 위기, 지속가능한 성장모색’이란 주제로 ‘제7회 여신금융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카드사의 영업환경 악화’와 향후 성장방향’을 발표한 윤종문 여신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카드사의 위험 요인으로 ▲2018 카드수수료 재산정 ▲간편결제서비스 확대 ▲조달비용 및 대손비용 증가를 지적했다.

특히 윤 연구위원은 카드수수료 재산정으로 인해 개편 초기에는 상품에 탑재되지 않은 부가서비스가 축소되고, 이후 상품에 탑재된 서비스까지 점진적으로 없어지면서 연회비도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내년에는 카드회원의 혜택 감소분이 1000억원, 2020년과 2021년은 각각 2000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했다. 카드사의 당기순이익 손실분은 내년엔 7000억원, 2020년 5000억원, 2021년 3000억원 등으로 3년간 1조 5000억원의 손실을 예측했다. 다만 그는 “카드회원 혜택이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단순히 계산된 값으로, 향후 카드사들의 대응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연구위원은 삼성페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다양한 간편결제 서비스가 나오면서 지급결제 시장을 잠식하고 있지만 서울시가 추진하는 제로페이의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카드수수료 개편으로 매출액 30억원 미만의 가맹점의 제로페이 도입 실효성이 사라지게 됐다”며 “제로페이의 QR코드 방식이 편의성, 보안성, 범용성 측면에서 모두 플라스틱 카드보다 경쟁력이 낫다”고 말했다.

이어 윤 연구위원은 정부의 적격비용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가맹점의 93%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되면서 적격비용의 유지당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정치적 이슈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인하되면서 3년이라는 적격비용 재산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외려 카드사의 수익이 악화될 경우 적격비용체계에 대한 카드사의 거부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편의성 보안성 범용성의 문제가 있는 QR코드보다 편의성과 보안성이 확인된 근거리 무선통신(NFC)결제방식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카드사가 개별적으로 빅데이터 사업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카드사가 공동으로 빅데이터플랫폼을 개발해 데이터 제공규모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진퇴양난’ 시중銀의 고민

금리 올리고 싶지만... 역풍 맞을까 전전긍긍

정기예금에 돈 몰려 조달비 증가
경기 지표 부진으로 하방압력 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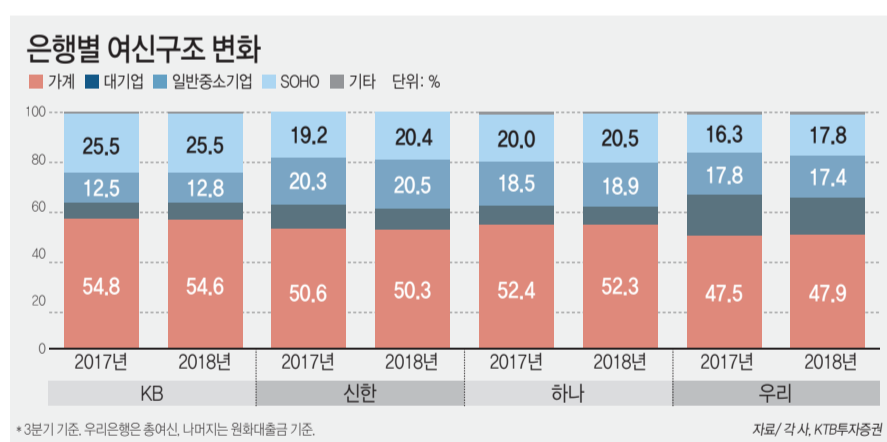
“2019년은 비용(Funding cost)과의 싸움이 될 것이다. 금리가 높은 상대적으로 위험 차주의 대출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 (A은행 B부행장) “(기준금리 인상이) 예전 같으면 어깨춤이라도 쳤을 것이다. 금융 포용이다 뭐다 해서 새는 돈은 많은데 경쟁(인터넷은행)은 치열해지고, 인건비는 갈수록 늘고 있어 걱정이다.” (B은행 C 임원)

모두가 금리(대출)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지만 시중은행들은 ‘진퇴양난’의 형국에 빠졌다. 경기 지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설비투자를 이끌었던 반도체 호황이 마무리되고 둔화 기조로 전환될 조짐을 보이고, 실업률은 3.5% (10월)로, 2005년 10월 이후 가장 높다. 반면 기준금리가 오르고, 상대적으로 비싼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으로만 돈이 몰려 자금 조달 비용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핵심 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정기예금으로 몰리고 있다.

10월까지 은행계정 수신은 76조7000억원 증가했는데,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예금은 각각 2040억원, 10조원 감소했다. 반면, 정기예금은 증가규모는 83조8000억원에 달한다.

핵심예금 비중도 지난 12월 39.8%에서 37.4%까지 하락한 반면 정기예금 비중은 38.1%에서 41.4%로 높아졌다. 10월 기준 핵심예금 금리는 0.27~0.4%인 반면 정기



예금 금리는 1.9%에 달한다. 핵심예금 비중감소는 조달비용 상승속도를 부추긴다. KTB투자증권 김한이 연구원은 “시금고 유치, 급여 및 결제계좌를 확보할 수 있는 협약대출 확대 등 전략적 노력이 수반되고 있으나 은행별 수신구조를 보면 기업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의 지원가성 수신 비중은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리를 올리면 된다. 하지만 지난해와 달리 시중은행들의 고민은 깊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9·13 부동산대책 이후 시중금리가 한차례 상승하며 1회 금리인상 기대감을 이미 반영했다. 각종 경기지표가 부진해 경기 하방압력이 크다. 금리를 올렸다가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면서 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실제 올해 들어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비)은 5~9월 동안 다섯달 연속 마이너스(-)다. 6월부터 9월까지는 10%대의 감소율을 나타낼 정도로 부진의 폭이 깊었다. 10월 들어 9.4% 증가했지만 승용차 수입이 이례적으로 20% 이상 늘어난 영향이 있어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장담하

기 힘들다. 소매판매액 증가율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무엇보다 고용시장의 부진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올 2분기 우리나라의 55~64세(중장년층) 실업률은 1년 전보다 0.4% 포인트 오른 2.9%였다. 같은 기간 미국(2.7%)의 실업률보다 0.2% 포인트 높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은행 대출금리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융채 등 시중금리에 연동되므로 시중금리가 상승하지 못하면 그만큼 은행 대출금리 상승도 저해된다”면서 “대출금리가 오르더라도 신규 취급 금리보다는 상환효과에 의한 완만한 잔액기준 금리의 상승을 예상한다”고 걱정했다.

가산금리 상승 여력도 제한적이다. 3, 4분기 은행 대출태도지수는 중소기업대출을 제외하고 전 부문에서 강화됐다.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눌러 차주를 확보하기보다는 위험이 낮은 우량차주 및 안전자산 중심의 대출성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김문호 기자 kmh@

우리銀, 퇴직연금 DB·DC형 수수료 인하

최대 DB 0.08%p·DC 0.05%p 적용

우리은행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 중인 중소기업의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확정급여형(DB)의 수수료를 최대 0.08%포인트, 확정기여형(DC)의 수수료를 최대 0.05%포인트 인하했다.

확정급여형(DB)은 적립자산평가액이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일 경우 최대 0.08%포인트 인하하는 등 3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일 경우 평가액 규모에 따라 운용관리수수료를 기존 연 0.25~0.35%에서 연 0.19~0.33%로 0.02%~0.08%포인트 내렸다.

확정기여형(DC)은 적립자산평가액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일 경우 운용관리수수료를 기존 연 0.30~0.35%에서 연 0.27%~0.32%로 인하해 0.03%포인트를 우대한다. 확정기여형(DC)의 자산관리



수수료는 평가액에 관계없이 모두 0.02%포인트 인하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DC를 가입한 사업장 중 우리은행을 자산관리기관으로 선정한 사업장도 자산관리수수료 0.02%포인트를 감면 받는다. 신규 고객 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도 인하일 이후 도래하는 수수료 기간에 맞춰 일괄 적용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를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했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